



Global Market Report 14-032

2014.08.25

일본 신 성장전략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안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I. 신 성장전략 내용

- | | |
|---|---------------------|
| 4 | 1. 신 성장전략 발표 배경 |
| 5 | 2. 신 성장전략 항목별 주요 내용 |
| 8 | 3. 일본 정부의 입장 |

II. 입법 등 향후 추진 전망

- | | |
|---|------------------------|
| 9 | 1. 주요 정책 항목별 향후 입법 스케줄 |
|---|------------------------|

III. 신 성장전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 | |
|----|--|
| 10 | 1. 대일본 인력 진출, 대일 수출, 대일 투자 진출 및 유치에 미치는 영향 |
| 15 | 2. 한·일 산업협력 관계 및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 |

IV. 대응방안 및 시사점

※ 참고자료

요약

I. 신 성장전략 내용

□ 신 성장전략 발표 배경

-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금융, 재정, 성장전략’
 - － 장기간 지속되어 온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완화정책(제 1의 화살)으로 통화 시장에 돈을 풀고 재정정책(제 2의 화살)을 실시. 2013년도 일본 경제성장 실현
- 일본 재부흥(再復興)전략 ‘JAPAN is BACK’ 발표

□ 성장전략 개정안의 목표와 전략

- 성장전략의 목표
 - －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 － ‘경제재건 10년’(2013~2022년) 동안 평균 명목 GDP 3%, 실질 GDP 2% 실현이 목표
- 추진 방향
 - － ‘투자 촉진’, ‘인재 활용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세계경제와의 통합 증대’의 4가지 관점을 기반
 - － ‘13년 발표한 성장전략 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노동시장 개혁, 농업 생산성 확대, 의료·간병 분야의 성장 산업화 등 분야 별로 전략추진방향을 제시
 - － ‘14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과감한 법인세 개혁, 국가 전략특구의 규제완화 및 여성 인력 활용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

□ “생산력”확보를 위한 움직임

- 법인세 개혁
- 기업지배구조 개선
- 노사정 회의
- 금융 자산 활용

□ 노동력 생산

- 인구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50년 후에도 1억 인구 유지가 목표
- 여성
 - 보육 대상 아동의 수용 범위를 2019년까지 30만명 분 확대
 - 배우자 공제 재검토 등 일하는 가구에 공정한 세제·연금 제도 연말까지 검토
- 외국인
 - 국가 전략 특구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할 외국인 수용
 - 2015년도부터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의 대상을 간병 등으로 확대,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근본적인 규제 개혁

- 고용
 - 2016년 봄 시행을 목표로 연 수입 1000만엔 이상의 전문직은 시간이 아닌 성과를 측정하는 업무 방식을 도입
 - 해고 시의 금전 해결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연내 해외 사례조사
- 의료
 - 2016년도를 목표로 환자의 동의에 근거한 혼합 진료 ‘환자 신청 요양제도’를 신설
 - 병원이나 간병시설 일체를 경영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위해, 2015년도 중 필요 조치 시행
- 농업
 - JA 전농권한 축소, JA 전농의 주식회사화 등의 농협개혁 추진

□ 일본 정부의 성역 없는 성장전략

- 근본적인 규제 개혁 추진
 - 아베총리는 “성장전략에 금기도 성역도 없다. 일본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벽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

II. 입법 등 향후 추진 전망

□ 표) 주요 정책 항목별 향후 입법 스케줄

III. 신 성장전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대일본 인력 진출

- 일본, 적극적으로 외국인 인재 등용 추진
 - －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를 대비에 건설업 및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기간 연장 검토
- 영주권 취득 단축, 한국 인재 진출 가능성 높아져
 - － 일본 영주권 취득을 위한 최소 체류 기간(5년→3년) 단축으로 고급 기술을 보유한 한국 인재의 대일 진출 가능성 확대

□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일본 경제성장으로 시장 확대 전망
 - － 대일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 일본의 중장기적 잠재 경제성장을 상승효과에 따른 대일 수출 증가 기대

□ 한·일 산업협력 관계 및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

- (기회요인) : 대일 인재 취업, 대일 수출 증가
- (위협요인) : 제3국 시장 경쟁 격화, 해외직접투자 유치 경쟁

IV. 대응방안 및 시사점

□ 대응방안 및 시사점

- (대일 인재 취업) 고급 인력풀을 구축, 취업연계유도
 - － 한·일 양국 정부정책 차원의 노력이 필요 (Working Group을 구성)
- (한·일 기업 제 3국 공동 진출 협력) 신흥국 등 제 3국 진출 협력 증가기대. 미쓰비시 상사, 한국 두산중공업과 화력발전소 공동 수주사례
- 법인세 절감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I

신 성장전략 내용

1. 신 성장전략 발표 배경

□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성장전략’

-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 금융, 재정, 성장전략
 - 아베정권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 완화정책(제 1의 화살)을 통해 시장에 돈을 풀고 재정정책(제 2의 화살)을 실시. 2013년도 경제성장*을 실현
 - * 2013년 경제성장률 1.6% 기록, 2014년 1.4% 경제성장 예상(내각부, 1월 발표)
 - 성장전략(제 3의 화살)의 주요 목적은 금융·재정정책으로 되살아난 일본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일본 재부흥(再復興)전략 JAPAN is BACK' 발표
 - 아베정권은 `13년 6월 5일 “일본 재부흥(再復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 대지진 이후에 침체된 일본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성장전략 계획을 발표
 -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않았다는 이유로 주목 받지 못하였고, 투자자들의 실망감의 반작용으로 당일 닛케이평균지수¹⁾가 500엔 하락했었음
 - `14년 6월 24일 각료회의에서 의결된 “일본 재부흥전략 개정안(신 성장전략)”에서는 이전 발표와 달리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근본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을 다룸

1) 일본경제 신문사가 도쿄증권거래소 1부시장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대표적인 225개 종목의 시장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

□ 신 성장전략 개정안의 목표와 전략

○ 성장전략의 목표

-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궤도 안착
- '경제재건 10년'(2013~2022년)을 정하고, 기간 내 평균 명목 GDP 3%, 실질 GDP 2%대 실현이 목표

○ 추진방향

-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과 인재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주요 목적
- '투자 촉진', '인재 활용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세계경제와의 통합 증대'의 4가지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13년 발표한 성장전략 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노동시장 개혁, 농업 생산성 확대, 의료·간병 분야의 성장 및 산업화 등 분야 별로 전략 추진방향을 제시
- '14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과감한 법인세 개혁, 국가 전략특구의 규제완화 및 여성인력 활용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

2. 신 성장 전략 항목별 주요내용

□ '생산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

○ 법인세 개혁

- 2015년도부터 법인실효세율을 낮추기 시작해 수년 내 20%로 인하
- 인하시기 및 인하율, 재원 확보 방법은 '14년 말에 결정
- 감세에 대비한 대체재원 확보 문제가 남아있어 유보 가능성도 있음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지침서 'Corporate Governance Code²⁾'를 2015년도까지 작성 완료 목표
- 기관 투자자의 행동지침서 'Stewardship Code³⁾' 보급 촉진

2) Cooperate Governance(기업이, 주주를 포함해 고객·종업원·지역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공정하고 신속·단호한 의사결정을 행하기 위한 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 원칙의 형태로 정리한 것

3)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일본판 스투어드십 코드)

- 노사정 회의
 - － 임금인상 및 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회의를 2014년 가을에 재개
- 금융 자산 활용
 - － 금년 가을까지 일본 공적연금(GPIF⁴⁾)의 자산 구성을 재검토, 주식 투자 확대를 촉진

□ 노동력 생산

- 인구
 -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50년 후에도 1억 인구 유지가 목표
- 여성인력 활용
 - － 미취학아동의 수용 범위를 2019년까지 30만 명까지 확대
 - － 배우자 공제 재검토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공정한 세제·연금 제도 연말까지 검토
- 외국인 근로자 유치
 - － 국가전략특구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할 외국인 수용
 - － 2015년도부터 외국인 기능 실습제의 대상을 간병 분야등으로 확대,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4) GPIF: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퇴직연금·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독립행정법인. 후생노동성 산하법인. 연금자금운용기금을 발전시켜 2006년에 설립. 운용방침의 확정 등을 행하고, 실제 운용업무는 신탁은행이나 투자고문회의에 위탁. 자금을 국내외의 채무·주식에 배분해 포트폴리오 운용을 실행

□ 근본적인 규제개혁

○ 고용

- 2016년 봄 시행을 목표로 연 수입 1000만 엔 이상의 전문직은 시간이 아닌 성과를 측정하는 업무 방식을 도입
- 성과급제도 적용을 받는 직원을 해고할 경우, 퇴직금 등의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조사 착수

○ 의료

- 2016년도 목표로 환자의 동의하에 요양시설에서도 진료 업무가 가능한 ‘환자신청 요양제도’ 신설
- 병원이나 요양시설 일체를 경영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위해, 2015년도 중 필요 조치 시행

○ 농업

- JA⁵⁾의 권한 축소, JA의 민영화 등을 포함한 농협 개혁 정책 추진
- 기업의 농지소유의 금지 해제는 5년 후 검토 예정

□ 기타

○ 에너지

- 방사능 유출 안전성이 확보되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추진 예정
- 2020년까지 전력회사의 송배전 부문의 사업 분리 추진
-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⁶⁾의 재검토

○ 관광

- 연내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 비자(상용 및 관광) 면제 실시. 필리핀, 베트남 대상으로도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

5) 일본의 농업협동조합

6) 전기 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통칭.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법적으로 일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3. 일본 정부의 입장

□ 근본적인 규제개혁 추진

- 이번 성장전략은 기본은 의료 및 고용, 농업 등 관계 부처 및 업계 단체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한 분야에 까지 근본적인 규제개혁을 실시하는 것

□ 성역 없는 성장전략

- 아베 총리는 “성장전략에 금기도 성역도 없다. 일본 경제의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벽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

II

입법 등 향후 추진 전망

1. 주요 정책 항목별 향후 입법 스케줄

[일본 성장 전략 향후 스케줄]

테마	내용 및 스케줄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 작성 등	- 기업지배구조 코드 검토·책정 ※ 2015년 정기국회 회기 말까지 - 상호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관련 검토 ※ 2017년도 말까지
일본판 Stewardship Code 신설	- 기관 투자가에 의한 코드 수용 현황 공표(3개월마다 업데이트) -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위한 정보 발신·공지 활동 실시 ※ 상기 모두 2017년도 말까지
GPIF 자산구성검토	- 확정 기여 연금제도의 운용 자산 선택 개선 등 검토 (공적 연금제도 전체의 재검토와 함께 검토) ※ 2017년도 말까지
배우자 공제 검토 등	- 경제 재정 자문회의에서 세금, 사회보장 제도, 배우자 수당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 2014년 말까지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	- 2015년도부터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 대상을 간병 분야 등으로 확대 -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련 제도 설계 및 법안 제출 등 ※ 2015년도 중
생산현장 강화 (농업)	- 법인 등의 경영 규모의 확대, 청년 농업 정착 및 농가 고용 촉진 - 농지 대형화 등의 농지 정비와 농업수리(水利) 시설 정비 추진 - 농업위원회·농업협동조합 등을 일체 개혁.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검토 ※ 2015년 정기국회 전까지 관련 법안 제출

자료원: 일본 경제재생본부 '일본재흥전략개정 2014'의 중 단기 공정표(발췌)

III

신 성장전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 대일본 인력 진출, 대일 수출, 대일 투자 진출 및 유치에 미치는 영향

□ 대일본 인력 진출

-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 유입 확대
 - 일본은 지금까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포함, 외국인 단순 근로자의 수용을 엄격히 제한해왔음
 - 그러나 이번 신 성장전략에서는 고급 외국인의 대일 진출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허용이 필수라는 논리가 있음
 -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건설 공사 수요에 대응하는 명목으로 건설업과 조선업 등 일손이 부족한 직군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기간을 5~6년으로 하는 제도의 신설을 검토
- 고도의 기술·기능 보유 한국 인재의 진출 가능성 높아
 - 6월 11일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의 일본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했음
 -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경영자와 연구자, 기술자 등의 ‘고급 인재’가 일본에 거주해서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연결하려는 목적
 - 또한, 법인세 감세가 실시되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일본 전략 특구에 진출하게 되면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추가 인력 수요가 기대됨

□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일본의 경제회복으로 시장 확대 전망
 - 일본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일본 시장 확대는 대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에 밝은 전망
 - 민간 경제 연구소는 이번 신 성장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잠재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힘
- 중장기적 잠재 성장률 성장 예측
 - (닛세이 기초 연구소) “(잠재 성장률의 효과는) 각각의 정책 자체가 질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숫자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지금 약간이라도 상승한다면 10~20년 후 GDP 수준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고 분석
 - 구체적으로 현재 0.5%로 예상되는 잠재 성장률을 성장전략으로 0.1%포인트 정도의 잠재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것만으로도 , 10년 후 1%, 20년 후 2%가 되어 결국 GDP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일본 종합연구소) “성장전략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잠재 성장률이 오르는 것은 10년, 20년 후가 된다.”며 “법인세 감세 및 기타 성장 전략의 효과와 함께 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한다면 잠재 성장률은 1%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여성 인력의 활용으로 1.5% 정도, 의료 분야의 재생의학 등의 발전이 있다면 관련 혁신효과로 2% 이상이 될 지도 모른다”고 예상

□ 한·일 기업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 신흥국 등 제 3국 진출 협력 증가 기대
 - 한·일 기업의 제 3국 진출은 한·일 기업의 강점을 살려, 보다 효율적으로 수주 획득을 할 수 있고, 신흥국 특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 많은 일본 기업들이 엔화 약세 효과를 살려 해외 사업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음
 - 앞으로도 한·일 기업간 제 3국 공동 진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미쓰비시 상사, 한국 두산중공업과 화력발전소 공동 수주
 - 일례로, 미쓰비시 상사는 한국 기업과 베트남에 진출했음
 - `13년 12월 미쓰비시 상사는 한국의 두산중공업 등과 함께 베트남의 전력공사가 발주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 수주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2기(基) 합계 약 1400억 엔 정도인 것으로 예측됨. 새로운 발전소는 2017년부터 1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가동 예정임

한·일 기업 제3국 진출 협력 사례

	기업	진출국가	분야
2011	미쓰비시 상사, 한국가스공사 등	인도네시아	LNG 개발
	스미토모 상사, 한국전력공사	UAE	전력판매
	신일본제철, JFE 스틸, 소지츠, 포스코 등	브라질	희토류 광산
	KYB, 만도	브라질	충격흡수기
	이토추 상사, SK 엔지니어링	터키	석탄화력발전소
	도요타 통상, 현대 엔지니어링	케냐	지열발전소
2012	마루베니, 포스코 등	호주	철광산개발
	소지츠, 대림산업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미쓰비시 상사, 한국전력공사 등	요르단	전력판매
2013	우베흥산, 미쓰비시 상사, 롯데 케미칼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스미토모 상사, 대한제당	중국	설탕
	스미토모 상사, CJ제일제당	베트남	밀가루

자료원: Jetro 센서(2013.11), 주간동양경제

□ 대일 투자 진출 및 유치에 미치는 영향

- 일본기업의 해외 M&A 투자 확대 추세 강화
 - 미국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2014년도 1~6월(24일 기준)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 투자 금액은 3조 4000억 엔 기록
 - 이는 전년 동기의 2.6배 규모로, 통계 자료가 존재하는 1985년 이후 최고 수치임
 - 일본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M&A 배경으로는 풍부한 재정적 여력을 들 수 있음. 엔저 추세는 담보상태이나 국내 주가 상승과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용이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
-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M&A 활발
 - M&A를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신흥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는 M&A가 활발해지고 있음
 - 실제로 도레이는 총 1000억 엔을 투자, 미국의 탄소 섬유와 한국의 수처리 막 제조업체를 인수했음.
 - 도레이는 “2020년 기업 성장목표를 향한 양적 확대의 주요 기반은 해외로, 한국은 그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라고 밝힘
 - 또한,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지원책과 우수한 인재 보유로 한국의 강점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 일본의 대한국 FDI(외국인직접투자)는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2. 한·일 간의 경쟁 및 산업협력 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 기회 요인

- (대일 인재 취업) 성장전략의 성공은 외국인 인력의 유입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
- 따라서 간병 복지 및 건설 공사 분야의 인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됨. 또한 고도의 기능·기술을 보유한 이른바 ‘고급인력’의 대일 취업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대일 수출 증가) 이번 성장전략을 통해 일본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다면 새로운 수입 수요 창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수출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위협 요인

- (제 3국 시장 경쟁 격화) 한·일 제조업은 자동차, 전기 전자, 기계, 조선업 등의 분야에 걸쳐 제 3국 시장에서 경쟁 중임
- 특히 그 중에서도 자동차 및 기계 분야에서 최근 일본기업이 엔화 약세 효과로 가격경쟁력을 점차 회복하고 있어, 우리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해외 자본 유치 경쟁)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을 통해 법인세 인하,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용 확대, 국가전략특구의 규제완화 등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특히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등에 있어서는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규제완화 공세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 또는 비교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임

IV 대응방안 및 시사점

□ 대일 인재 취업

- 고급 인력풀을 구축, 취업연계유도⁷⁾
 - － 2001년 한·일 IT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비자발급 완화조치로 한국 고급 인력의 일본 진출이 가능했던 것처럼, 한·일 양국 정부정책 차원의 노력이 필요. 한·일 자격상호인정 Working Group을 구성
 - － 기술인력 외에도 최근 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일손부족 현상의 해결책으로서, 일본 내 다양한 직종으로의 한국 인재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음
 - * 일본의 2014년 유효구인배율⁸⁾: 1.04배(1월) → 1.05배(2월) → 1.07배(3월) → 1.08배(4월) → 1.09배(5월)
 - － 한편, 전문 인력 외에 다양한 직종을 목표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을 위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이외에, 취업 활동에 적합한 별도의 비자 프로그램 마련 필요

□ 한·일 기업 제 3국 공동 진출 협력 추진

- 신흥국 등 제 3국 진출 협력 증가 기대
 - － 한·일 기업의 장점을 살려 한국기업이 제 3국에 공동 진출함으로써 신흥국 특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향후 한·일 기업의 제 3국 공동 진출 증가 기대

7) 한국 산업인력공단, 한국인력 일본진출을 위한 제언 자료 참조 (2011년)

8) 전국 공공직업안전소에 신청된 구직자수에 대한 구인수의 비율. 1배 이상이 되면 구인이 구직을 상회

□ 해외 자본 유치

- (투자 환경 개선 필요) 규제개혁이 성공한다면, 해외 자금 투자 유치 관련 일본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한국은 규제완화 등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환경 개선 필요

□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경영 능력 제고 필요

- 일본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불황·디플레·엔고 등 지속적인 경기 악순환 해결을 위해 대형 경기 부양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해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음
 - － 정부가 주도하여 특정 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정책보다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쉽도록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 예를 들어, 법인세 절감, 사업 자금 조달 방법의 다양화 및 관련 규제 완화 등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편이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 전진하는 아베노믹스 -최근의 진전과 아베정권의 성과-

- 기업지배개선(Corporate Governance Code)
 - 일본판 스투어드십 코드⁹⁾의 수용을 표명한 기관투자자의 리스트 공표
 - . 2014년 5월 말까지 공적연금기금, 대기업 보험회사, 신탁은행 등을 포함한 총 127개 기관 투자자가 同 코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공적연금 자금(GPIF)의 운영 재검토
 - 공적연금 자금 운영에 대해 기본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한 후 새로운 벤치마킹 대상의 추가 및 투자대상의 다양화 추진

GPIF 운용 재검토를 위한 노력

- 기본 포트폴리오 재검토
 - 연금제도의 재정 검증을 바탕으로 기본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할 예정
 - 오차 허용 폭 안에서 유연한 운용
- 벤치마크 관계
 - 일본 내 주식의 패시브 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TOPIX 뿐만 아니라 “JPX 닛케이 인덱스400” 등 새롭게 3개의 지수를 채택



- 새로운 운용대상 추가
 - DBJ·OMERS와의 공동 투자협정에 기초한 인프라 투자
 - 특가 연동 국채 구입(2014년 4월 이후)
 - J-REIT를 투자대상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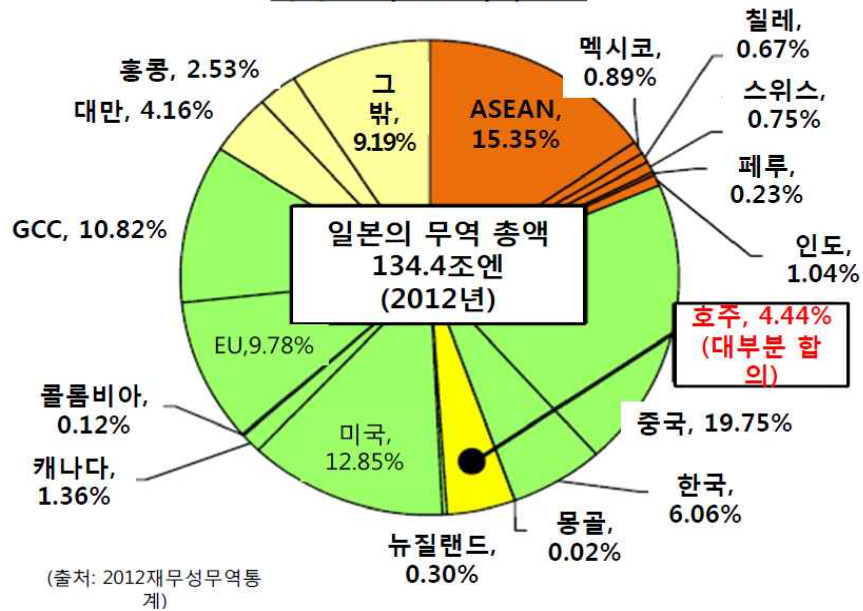
- 일본·호주 EPA, 큰 맥락에서 합의
 - 일본 역대 최고 규모의 2개국 간 EPA로 대강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 일본은 쇠고기 관세인하, 호주는 자동차 관세철폐를 담는 등

왕복무역액의 약 95%를 협정 발효 후 10년간 관세를 철폐할 예정

일본 경제연계 진척도

ASEAN 여러나라를 중심으로 13개국·지역과 EPA가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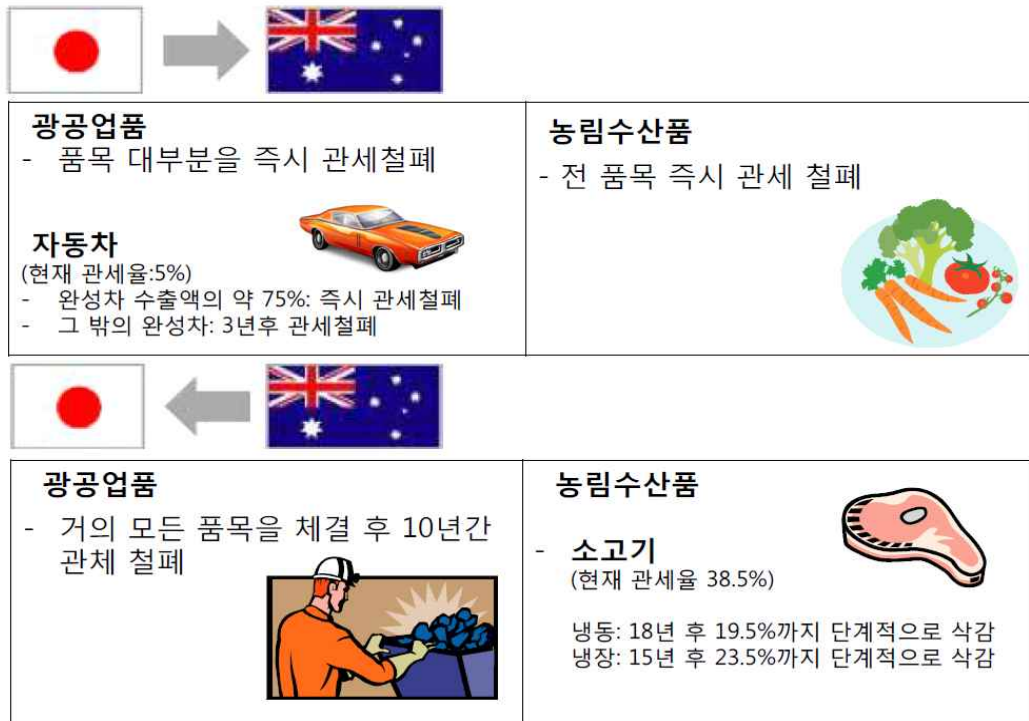
일본무역 총액이 차지하는
나라·지역의 무역액 비율



9)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10) 2013년(3.4조엔) 6월 말까지 70%, 9월 말까지 90% 정도/2014년도(12조엔) 6월 말까지 40%이상, 9월 말까지 60%이상

일본-호주 EPA 주요 합의(2014년 4월)



○ 최근 드물게 보는 수준의 임금 상승 실현

- 4월 1일자로 1인당 평균 임금상승률은 2.20% (작년 동기대비 : 1.80%)

○ 법인실효세율의 인하 실현

- 4월부터 법인실효세율을 2.4%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가결·시행

○ 2014년도 추경예산, 2015년도 조기 예산집행

-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도 추경예산 및 2014년도 예산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목표¹⁰⁾ 하에 조기 예산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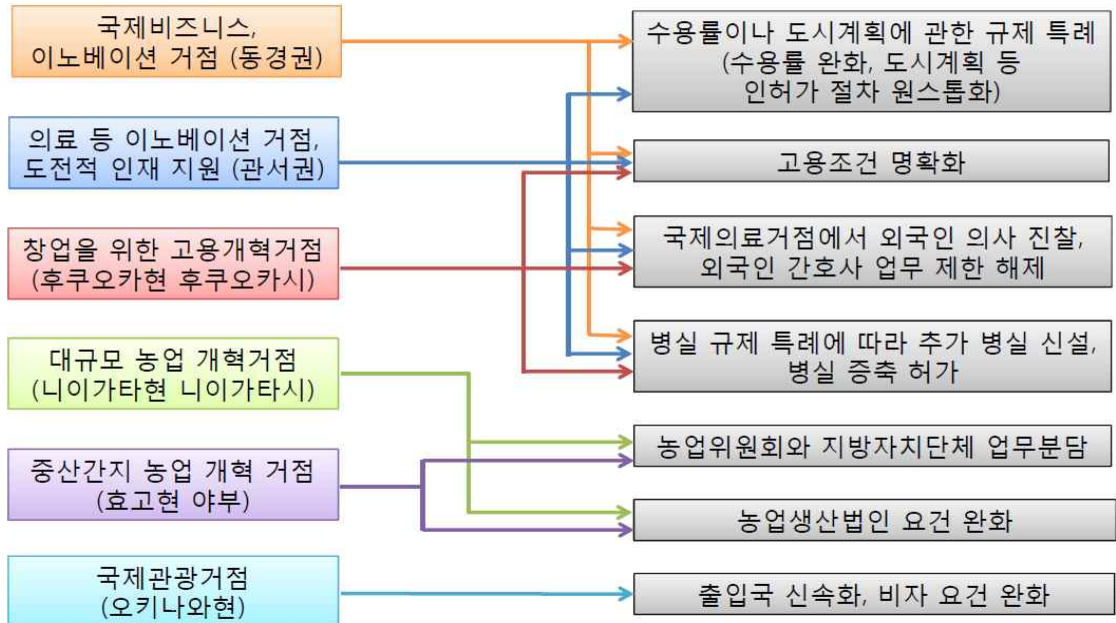
○ 국가전략특구 지역 지정

- 2014년 5월 1일 제 1탄으로서 도쿄권, 관서권, 니이카타현 니이카타시, 효고현 야부시,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오키나와현 등 6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 또 채용규정이 불투명하다는 해외기업의 고충에 대응하기 위해 판례에 따라 고용가이드라인을 책정

국가전략특구 규제 개혁 예

[각 지역 프로젝트 목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개혁 예]



○ 건설 분야의 외국인력 활용

- 경제부흥 사업이나 2020년 도쿄 올림픽 특수에 따른 건설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재를 활용하는 긴급 조치 결정 (2020년도 종료)

자료원: 수상관저 홈페이지 (2014년 6월)



작성자

◆ 도쿄무역관	박은희 과장
◆ 선진시장팀	김광수 차장



Global Market Report 14-032

일본 신성장 전략내용과 우리의 대응방안

발 행 인 | 오 영 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4년 8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